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92

2024. 04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4년도 건축·도시분야
중앙부처 업무계획



건축도시정책동향 Vol. 92

발 행 :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 이 영 범
발행일 : 2024년 4월 30일
I S S N : 2635-5140
기 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 044-417-9697
이 메 일 : leejm@aur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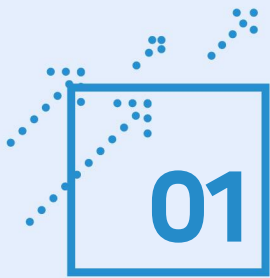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01 ● 건축·도시 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02 ● 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제처



건축·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건축·도시공간과 연관성이 높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중앙부처의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토대로, 10대 주요 정책테마를 도출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및 보행안전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안관리 지역별 치안수요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내 상호 돌봄문화 조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강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안전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통학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 AI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파관리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중점관리지역인 전국 100곳으로 확대 적용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사후관리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으로 소화전 범람 위험 예측 및 주민대피경보 자동 전파,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통한 국내외 사례 및 데이터 분석 기능 향상• 위험지역 인프라 확충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정비,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확대,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산사태 피해 예방, 침수취약도로로 자동 차단·경보시설 설치• 재해영향평가 고도화 대규모·고밀도 개발 증가에 대응해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해영향평가법 제정 추진• 사회재난 관리체계 개선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재·개정을 통한 재난관리주관기관 책임성 제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나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신종·유사 놀이시설(무인키즈폴 등)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피해저감 재난 예방·대응체계 구축 등 방재인프라 지속 확충, 자연재해 취약지역 사전 관리, 선제적·능동적 위기 대응으로 국가유산 피해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가·항만 안전 강화 사고·재해 빈도가 높은 해안가·항만 등 지역 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심인프라 정비 대심도 빗물터널, 지하방수로 사업 착수, 하수관 키우기 사업 확대• 치수 대책 효과적인 홍수 방어를 위해 안전기준 상향, 홍수 취약 지구 조사·지정

건축·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테마3

공간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생활지원 고령자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관 등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감·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없는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 지원 확대

테마4

정주환경 개선 및 주거문화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발코니 설치 허용,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공공 신축매입약정 확대, 구입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등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공사비 갈등 완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사업 가능 지역 확대, 절차 간소화 및 참여유인 제고, 인센티브 및 자금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대응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컨드홈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광 활성화 불법 주거 전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 유도,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변화 대응 식사·청소·목욕 등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연계 주택 도입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정착환경 조성 빈집을 정비하여 공유사무실·공원 등으로 활용,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주택 신규 취득(세컨드 홈) 시 세 부담 완화

건축·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테마5 기후변화 대응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이행 탄소배출 감축 기업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 녹색투자를 통한 지역 활성화 오염지역 지역발전 선도모델화, 서천 구 장항제련소 주변부지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주물공장 일대 오염정화 • 환경규제 혁신 대기오염 총량제 유연성 제고, 환경영향 차등 평가, 소규모 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지자체 평가, 재난 대응사업 평가 제외 등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탄소 확산·저탄소 전환 가속화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23.7.) 실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탄소흡수원 확충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공간 확대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도심 속 문화유산 탄소저장량·흡수량 조사

테마6 미래 건축·도시공간 선도 및 규제 혁신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활용 법적 기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 모색 및 확산 기반 마련 • 데이터 공유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하여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방안 모색 및 확산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농장 성장 일정 지역 내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 및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4.12.) 수립 • ICT 활용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확대 스마트 교통모형을 활용한 중심지·배후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AI 기반 환경관리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환경정책 결정 지원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위험요인 예측 서비스 개발

건축·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테마7

중소도시 활성화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24. 下)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 수립('25),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 및 사업성 개선 • 이주대책·지원조직 마련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 선 조성,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HUG·LX·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자체·주민 지원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 방문인구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기반 확충, 사업 확정시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트 등 활용·연계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추진 지원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지역 발전 지원 접경지역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 외곽섬지역 생활기반시설 강화 등 맞춤 지원 •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지역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등 특례 추가 발굴 • 지역 맞춤형 통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통계, (가칭)지역 특성 MBTI 등 맞춤형 통계자료 개발·제공 • 균형발전 17개 시·도 권역별 특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 공유재산 활용 공유재산 총조사 도입 및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 누락재산 발굴 및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사용 도모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인구 확대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지정·승인 권한 지자체 이양 • 지역 문화인프라 규제완화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 이양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육성 지역상권기획사 육성, 상권주체가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제 역량강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이행 지원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지원 인구소멸지역 등에는 학교복합시설사업 총사업비 50% 일괄 지원

건축·도시분야 10대 주요 정책테마

농·어촌 지역 특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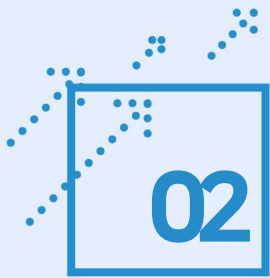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활용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 • 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사업 통합 지원 방식의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외부인구·자본 유입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 • 도시민의 수요 충족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활성화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도서 주민의 안정적 삶 지원 어촌 소멸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 수립,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등 민간투자 연계 경제·생활 인프라 신규 조성

역사·문화적 건축·도시공간 가치발굴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체제 출범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에 따른 법제 및 조직개편, 국가유산 미래비전 발표를 토대로 정책 발굴·수립, 국보 승격 등 유형별 국가유산 지정·등록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보호체계 구축 매장유산 민간 조사비용 지원 확대, 보존조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 주도 전국토 정밀 지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 관광자원으로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자생력 강화 노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공간화 지원, 옛 경북도청·옛 충남도청 활용 문화복합공간 조성 등

역사·문화적 가치발굴을 위한 공간관리체계 마련

중앙부처	주요 정책과제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산업 육성 국가유산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국가유산 산업조사 국가승인통계 실시 등 산업 활성화 • 정주환경 개선 주민거주 국가유산 지역 경관 개선사업 지원 등 국가유산 보호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국가보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상징공간 마련 서울현충원 재창조,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용산 호국보훈공간 서울현충원-전쟁기념관-광화문 상징공간 조성, 지역별 국가상징공간 조성 • 보훈공간 조성 미주지역 독립운동 본거지였던 LA 흥사단 건물 리모델링, 독립운동사적지와 연계하여 독립운동 벨트 조성



건축·도시분야

중앙부처 주요 업무계획

아래의 중앙부처 업무계획 중 건축·도시 관련 세부계획 중심으로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제처

업무추진 방향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해당사항 없음

보완 사항

-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 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
-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도 정상화될 필요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선호도 높은 도심 공급 확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재건축·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스트트랙 도입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 안전진단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 •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 • 노후요건 완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접도율, 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 • 정비구역 요건 완화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흥지,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 개선 • 공사비 갈등 완화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24. 下)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 수립('25)

주요 업무계획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완화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특별법 제정 완료) 사업시행 지원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방식(조합 또는 신탁)을 선택하고,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 지원('25) 이주대책·지원조직 마련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 先 조성,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국토부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LH·HUG·LX·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지자체·주민 지원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확대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 노후도 요건 완화로 사업대상지 확대 공공참여 확대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LH 참여로 사업성 보완, '24년 공모로 신규사업지 추가 선정 절차 간소화 조합설립 주민 동의를 완화(80→75%)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교통·경관심의 등) 등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요건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현행 2/3에서 50%로 완화하여 사업추진 확대 지구지정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용적률 완화 등 특례부여 공공지원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 구축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도시·건축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수 제한 폐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現 300세대 미만) 폐지 방설치 제한 폐지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주차장 기준 완화 입지규제 완화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 허용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촉진

■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공공주택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공 전환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공공주택 추가 공급 •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회복 건인 • 공급속도 제고 LH 공급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 및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택지 발굴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24년 신규택지 2만호 발굴 추진, 토지이용 효율화로 '24년부터 3만호 이상 물량 확충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지방사업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업무추진 방향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목표	활력있는 민생경제 ① 민생경제 회복 ② 잠재위험 관리 ③ 역동경제 구현 ④ 미래세대 동행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건설 투자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지속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관광·공유숙박 활성화 부동산시장 연착륙 인구·기후위기 대응
--	--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경기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 거시여건은 소폭 개선 예상되나 구조적 리스크 확대 대내 회복세 확대되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민생 어려움 예상
부동산시장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가운데 최근 거래 또한 감소 추세
민생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 상승세가 완만히 둔화되면서 상반기 중심 고물가 부담 지속 고용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 둔화 전망
구조적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구조 변화 역동성·성장잠재력 저하, 인구·기후위기 등 경제구조 변화 가속화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민생경제 회복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물가·서민생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된 11.5만호 이상 공급 • 주택유형 다양화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분양가·임대료 인하 유도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관광 활성화 불법 주거 전용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을 유도하고,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마련 • 공유숙박 활성화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역 확대(5개도 → 전국), 대상 확대(50→500채), 증축 제한 완화 등
지역경제·건설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권 특화발전 4+3* 초광역권 발전계획('23.10)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24.3) ※ 4대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 • 생활인구 확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방문인구 확대 미니 관광단지 신설(^{기존}50만㎡이상→^{신설}5~30만㎡), 지정·승인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 • 정주인구 확대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24.上) • 공공부문 주택공급 활성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 가속화 • 민간부문 주택공급 애로해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규제 완화 등 민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

■ 잠재위험 관리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부동산 PF 연착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시장 정상화 '24년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 관련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역동경제 구현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혁신 생태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규제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 지역(비수도권 한정)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 (농지)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유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 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 추진 (산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국민 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하여 산지 이용 확대

미래세대 동행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인구·기후 위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버타운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24.上) 저탄소 전환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을 마련('24년)하고,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

주요 업무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추진 방향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3대 농정 방향 대전환을 토대로 적극적·공세적 정책 추진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세대 육성 •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및 가축질병 예방 •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경제 활성화 	지속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농업 확산 • 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동물의료체계 개선
--	---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혁신 가속화 • 농촌지역 활성화 촉진 및 농지규제 합리화 	보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람·자본 유입을 위한 혁신 필요
--	---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활용 확산으로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첨단기술과 타 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청년층의 스마트농업 등 취·창업이 증가, 도시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전장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및 지역·산업간 격차에 따른 농촌지역 성장동력 약화 등 소멸 이슈 심화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ICT, AI 등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농장 성장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설치 가능(농지법 시행령 개정)하도록 정비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
청년 세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지원 확대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에게 공공임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 확대

■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튼튼한 식량안보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기반 관리 강화 홍수 등 피해 대비 저수지 퇴적토사 준설 등 수리시설 개보수 투자 확대 ICT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및 원격조작 장비 설치

■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저탄소 영농 확대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행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간척지 활용 영농형태양광 실증 착수 및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4개소 추가 조성(누적 12개소)

■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농촌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인구·자본 유입 확대 농촌 빈집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및 조건 완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빈집은행 운영 ※ 지역 확대(5개도 → 전국), 대상 확대(50→500채) 영업일 수 제한(300일) 폐지 등 세제 특례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및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마련 규제 완화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의 임시거주가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주요 업무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농촌공간계획 본격 수립 및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화 농촌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 목표 등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 마련, 「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농촌협약제도 추진 농촌지역의 재생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지속 확대, 농촌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 관련 사업 통합 지원 방식의 새로운 농촌협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 • ICT 등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비대면 진료 시범도입, 스마트 교통모델을 활용한 중심지·배후 마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동물복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 취약분야 개선 지자체 보호센터 확충(신규 11개소) 및 민간 보호시설 입지·환경 개선 ※ 입지이전·재건축·환경개선 지원예산 증액, 시설개선 컨설팅 지원(30개소)

업무추진 방향

목표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

혁신·미래, 보존·전승, 포용·상생

- ① 60여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 출범
- ②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요구 증대
- ③ 급속한 정책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국가유산 보호체계 강화
- ④ 급증하는 국가유산 향유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 삶의 질 증진
- ⑤ 국격에 걸맞은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기대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
- 국가유산 보호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여

지속 정책

-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문화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장
- 과도하고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혁신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보존 역량 강화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틀 마련
- 보존지역 규제범위 및 규제강도의 합리적 조정으로 보존과 개발 간 균형 추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최초 마련
-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국내 도입기반 마련

보완 사항

- 국가유산 보존에 따르는 불가피한 규제로 국민 불편이 상존하고 국가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지속 발생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가속화, 일상화된 기후변화, 반달리즘 등 국가유산 보존·전승 위기 직면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국가유산 체제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조직 개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국가유산 체제 관련 법령 정비 완료 및 국가유산청 출범 • 미래비전 정책 발굴 국가유산 미래비전(‘23. 12. 발표)을 토대로 국민의 편익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수립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등록 확대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보 승격 등 유형별 국가유산 지정·등록 확대 추진 • 보존·복원 세계유산, 국가지정·등록유산, 공능 등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유형별 특성과 고증에 따른 보수·복원 추진 •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규명하고, 향후 정비사업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권별 중요유적 발굴조사 추진

■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국가유산 보호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진단 도입 규제 간소화를 위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 등 영향진단 도입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규제범위·강도 완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범위 재조정 지속 추진, 기 허용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통한 규제강도 완화지역 확대 • 국가유산 경관 개선 국가유산과 주민의 공존·상생을 위해 노후 생활환경 정비 등 주민거주 국가유산 지역 경관 개선사업 신규 지원 • 민속마을 정주여건 개선 국가민속마을 내 생활기반시설(통신, 상하수도, 가스배관망 등) 정비 지원 등 거주민 주거생활 편의 도모
차별없이 누리는 국가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기반 확대 권역별 관람환경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지원 • 궁능 관람환경 개선 보행약자를 위한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 등 시설물 관람환경 개선·정비 사업 확대

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동력으로 가치 확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국가유산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화 추진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 산업 육성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정책 제도를 위해 「(가칭)국가유산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 국가유산 산업조사 국가승인통계인 국가유산 산업조사를 실시, 업종별 산업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관련 분야 정책수립 활용
지방소멸 위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유산 활용 개성 넘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체험, 답사, 공연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 관광 견인 • 역사문화도시 조성 역사문화자원이 집약된 고도(古都), 근대역사문화공간, 역사문화권 지역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명소로 탈바꿈
미래 국가유산 포괄적·선제적 보호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지정유산 보호기반 마련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향토유산) 조사·목록화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활용방안 마련 • 지역 관리기반 강화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시행('24. 11.)에 대비, 배치 기준 마련 및 전문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 제도 확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4. 9.)에 맞춰 확장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 예비문화유산제도 시행 생성된 지 50년 미만의 가치있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미래가치 선제적 보호·활용
디지털 헤리티지 활성화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축적 과학적 보존·활용을 위해 지정유산 대상 3차원 정밀 기록 데이터 확충 및 개별 분산된 원형기록정보 통합 DB 구축 • 데이터 활용 축적된 고품질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유산 보존, 복원, 향유,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확대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재해·재난 대비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인프라 구축 국가유산 현장 방재시설·방재인력 등 방재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신속한 재난 예방 대응체계 구축 • 사각지대 관리 강화 공능을 비롯한 국가유산의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견고한 방재시스템 구축,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선제적·능동적 위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사전관리 산지, 계곡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의 국가유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마련 • 유형별 예방·신속대응 풍수해, 화재 등 재해 유형별 선제적 방재를 강화하고, 피해 초기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확대
탄소중립 실현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흡수원 확충 문화·자연유산의 보호공간 확대를 통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국가유산의 가치와 기능 제고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별 예방·신속대응 도심 속 4대궁·조선왕릉의 탄소저장량·흡수량 조사, 탄소중립 기여도 분석을 통해 국가유산의 탄소 저감 가치 홍보

■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유산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재 추진 유네스코의 변화된 등재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경쟁력 우위 선점 • 영향평가 제도 시행 세계유산의 영속적 보존과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설계 및 시행(‘24.11.) • 통합관리체계 마련 시·도를 달리하는 연속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추진
국외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활용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기반 강화 현지 조사·연구 확대, 유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언론매체 대상 공개매입 적극 홍보 등 환수 전략 다각화 • 현지 보호·활용 국외문화유산 보존·복원 지원 및 전시 개최, 아카이브 DB 정보 공개 등 국내외 관심 제고 및 향유 기회 제공 • K-공유유산 시범사업 소재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K-공유유산을 대상으로 현지 보존·활용 협력사업 본격 추진

주요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추진 방향

목표

-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
- ①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

②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경제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

③ K-컬처 시대 선도하는 글로벌 新문화전략

④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⑤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

<div>신규 정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선제적 대응 	<div>지속 정책</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 특별 지원·지역문화 자생력 키우기 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	---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div>주요 성과</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정책*, 대한민국 문화도시, 로컬 100 등 문화가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23.3), 지방시대 종합계획-문화특구 포함(‘23.11) 발표 	<div>보완 사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생산·유통·향유 생태계,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관광 등을 해소, 지역 자생적 발전 기반과 역량 제고 요구
--	---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위기, 국민 문화 생활 위축 및 수출-내수 괴리 극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은 문화소비 걸림돌로 작용, 국민의 문화소비 부담 경감하는 문화 민생 정책 추진 필요 세계 콘텐츠 시장의 성장세 지속 전망, 국제관광 회복세 등 고려,

주요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내용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적 경제 기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K-컬처 시대, 세계를 뒤흔들 글로벌 문화전략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K-드라마, K-팝 등 대중문화에 이어, K-클래식, 한국어, 한식 등으로 확장되면서 K-컬처 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전략 요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하계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스포츠행사는 문화교류와 우리 문화 확산의 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인구·지역 위기, 혁신적·창의적 해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탄소중립 등 위기 심화, 혁신적·창의적 지역 전략 요구 지역·세대·소득 문화 격차 여전, 지역 자생적 문화활동 여력 미흡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심화 우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문화로 지역소멸, 고립감 등 사회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지역 문화 자생력 키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고유 브랜드 강화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13개 도시 고유성·특화성 대표 사업 컨설팅 유희시설 문화공간 재창조 노후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공간화 지원, 옛 경북도청·옛 충남도청 활용 문화복합공간 조성* 등 ※ 옛 경북도청 활용방안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옛 충남도청 본관동 리모델링해 국립미술품수장센터 건립 규제혁신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 이양 추진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 특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인프라 조성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기존}50만㎡→^{신설}5~30만㎡), 지정·승인 권한 기초지자체장 이양(시·도지사→시장·군수) 관광유도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체 대상 융자조건 우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 확대, 숙박·식음·관광·체험 등 할인혜택 제공

업무추진 방향

목표

- 1 의료개혁 본격 추진
- 2 약자복지 강화
-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1

지속
정책

- 두터운 약자 보호·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
- 국민돌봄 통합지원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보완
사항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안전망 부족 문제 여전히 지적, 지역·필수 의료 위기는 더욱 심각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물가, 저성장 등으로 취약계층 어려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분배는 개선 추세,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의료격차, 필수 의료 붕괴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건강 관심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하나 인력공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저출산 지속, 노인 증가로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비 증가로 향후 복지지출 급증 전망, 1인 가구 비중·연령이 빠르게 상승, 이에 따라 돌봄 수요 또한 확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망 형성 지역주민 간 연결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마련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국민돌봄 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포괄서비스 식사·청소·목욕 등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 연계 주택 도입 건강생활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관 등 활용한 식사, 여가,건강 등 생 활지원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복지주택) 국토부 공급 확대(연 3천호), 복지부·국토부 협업 통한 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주택) 인구감소지역 등 대상 분양형 허용 추진 (노인복지관) 미설치 시군구(34개) 대상 설치 확대, 경로식당 운영 지원 등 추진

업무추진 방향

목표

- ① 국민과 종사자의 민생 안정
- ②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
- ③ 지방시대와 글로벌 중추국 뒷받침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1

지속
정책

-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사고·재해 없는 바다 구현
- 권역별 레저거점, 신산업 육성 등 지역 활력 제고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1

보완
사항

- 어촌 인프라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어촌소멸 지속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어업인, 어촌·섬 주민의 생활 안정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어촌·도서 주민의 안정적 삶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 수립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어촌·연안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 어항 배후부지 소포센터, 음식점 등 민간개발 허용 법적근거 마련('24) • 인프라 신규 조성 민간투자연계,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인프라 신규 조성(65개 설계, 35개 선정), 어촌 인프라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 도서지역 교통권 확대 교통소외도서 여객 지원 확대

■ 깨끗하고, 재해·사고 없는 바다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재해·사고로부터 자유로운 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재해 빈도가 높은 지역 안전 강화 연안재해 근본적 저감을 위해 국민안심해안* 20개소 신규 지정 추진,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항만 재해 예방 인프라 보강*, 방파제 등 사고 발생이 잦은 구역에 안전 표지판·표지선 의무 설치 ※ 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해안가 지역을 국가가 매입 → 완충공간으로 조성 ※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 방호벽 설치 등 침수 취약지구 정비(39개항 65개소)

■ 해양 레저·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해양레저 기능 통합, 대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 기반정비 10여개로 분산된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24) • 권역별 대형 프로젝트 민간투자과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착수, 부산·경남·전남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

주요 업무계획 행정안전부

업무추진 방향

목표

- ① 임기 반환점을 맞는 해로, 국정과제 핵심성과를 다수 창출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적 변화' 체감 필요
- ②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의 가교이자 정부 전체의 행정체계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의 핵심 플랫폼 기관으로서, 복합적인 위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개혁 선도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

지속 정책

- 지방시대 본격 개막에 따른 지역 주도의 성장 발판 마련
-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 일상 속 안전 강화
- 재난피해 지원 현실화
- 발전적 과거사 문제 해결

주요 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주요 성과

- 기존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 방식에서 탈피, 지역의 자율성과 잠재력에 기초한 지역 주도 성장의 발판 마련
- 기후 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전략, 65개 세부과제 충실 이행

보완 사항

-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대전환 필요
-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예상치 못한 재난 유형에 대한 예측·대비 및 대응역량도 시급히 보강할 필요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자연 감소 속에서 수도권 쏠림현상 더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불확실성 증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재정 운용 여건은 '24년에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 못지않게, 지역별 비교 우위 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차별화된 특화발전 전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신종 사회재난 우려 확산 및 이상기후 일상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자 지원,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전 확보 등 국민이 중시하는 정부의 기본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산망 장애 및 이용격차 등 우려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틈없는 디지털 환경 구축과 함께, 디지털 약자 등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필요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 있는 국토 활용 17개 시도 및 권역별 특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해 전국도의 잠재성장동력 현실화 소외지역 발전 지원 접경지역의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소양호수권역, 유네스코 지질자원권역 등), 외곽섬지역 생활기반시설 강화* 등 맞춤 지원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교통시설 및 수도·전기 공급시설 우선 지원 등
매력적인 지역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착 환경 조성 빈집을 정비해 공유사무실·공원 등으로 활용,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신규 취득(세컨드 홈) 시 세부담 완화 특례
지역 고유성 활용 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지역 건의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특례 추가 발굴하여「인구감소지역법」개정 지역 통계 다변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통계, (가칭)지역 특성 MBTI* 등 맞춤형 통계자료 개발·제공 ※ ('23년) 7개 지자체 시범 산정 → ('24년) 쉼 인구감소지역 대상 산정 ※ 인구, 입지, 지역가치,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 분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적극 활용 공유재산 총조사 도입 및 분석·진단을 통해 누락재산 발굴 및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사용 도모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	------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데이터분석과 AI를 통한 위험징후 조기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관제로 신속 대응 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해 이상징후 신속 포착·통보 • 빈틈없는 인파관리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모든 중점관리지역에 확대 적용 ※ 인구 밀집도 및 공간 특성(협소도로 비율 등)을 통해 위험도 분석, 관계기관 상황전파 • 침수위험 조기 파악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소하천 범람 위험 예측 및 주민대피경보 자동 전파 • 생활 속 위험요인 예측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데이터(텍스트, 사진 등)를 AI가 분석해 위험요인을 예측하는 서비스 개발 • 잠재재난 분석 강화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現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확대 개편)를 통해 국내·외 사례 및 데이터 분석기능 향상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정보 통합제공 개별 시스템* 6종 별로 제공되던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안전24'로 통합하여 위치 기반 원스톱서비스 제공 ※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등 • 재난상황 통합관리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28종)을 '재난관리24' 포털로 연계해 디지털 통합 모니터링체계 구축
주민대피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대피시설 통합 운영 재난·민방위 등으로 용도가 구분된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주민 혼선 방지 및 빠른 대피 유도
위험지역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사면 관리 강화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정비,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확대(산림청 협업),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산사태피해 예방 •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 시설별 담당자 지정, 15cm 침수 시 전면 통제 의무화,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 • 침수취약도로 선제 관리 자동 차단·경보시설 조기 설치
자연재난 대비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수해 예방기준 개선 이상 기후를 고려해 농식품·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연구를 통해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
일상안전교육 대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시설 확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으나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신종·유사 놀이시설(무인키즈풀 등)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확보 및 AI 스마트 횡단보도(어린이 인식, 보행신호 자동 연장) 설치 확대(매년 100개소)
주민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방재단 활동 확대 자연재난에 한정된 자율방재단 활동영역을 사회재난까지 확대, 감염병 방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에 적극 참여 • 안전신고 주민이 참여하는 계절·지역별 집중신고제(안전신문고 활용)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인 발굴 및 사전 예방조치 강화

주요 업무계획 행정안전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재난피해자 현장형 지원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주거 개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공급형태 다양화, 공급방식 변경(지자체 제작·공급 → 임차 후 공급)을 통한 신속 지원 • 신속한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중심 안전관리 강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 안전수준 제고 •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 관리 지역별 치안수요의 특성을 반영해 민·관 협업으로 지역사회 내 상호 돌봄문화 조성 지원
발전적 과거사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공간 조성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조성('24년)해 민주화운동 기록수립·보존 및 민주주의 연구, 시민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

업무추진 방향

- ①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 ②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 ③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녹색투자가 이끄는 지역 활성화
- 민감·취약계층 집중 지원

지속 정책

- 인프라 정비·안전관리를 통한 치수대책
-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 및 감축 지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

대내외 정책여건

구분	내용
• 갈수록 강해지는 일상화된 이상기후가 국민 안전 위협	•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하천제방 월류 유실로 인명 재산 피해 • 극심한 가뭄 신도시 산단개발 등 물수요 증가 • 21세기 후반 극한 강수량 증가 지역 계절간 강수편차 심화 예상
• 초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생활 속 환경 위해에 대한 국민 불안 지속	• 기온 상승 종식 등으로 초미세먼지 악화 우려 • 생활화학제품 소비증가 구입경로 다양화 등으로 국민 관심 증대
• 자연 향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 친환경 여가 수요 증가 중이나, 자연해택 이용 정책은 다소 미흡 • 전시동물 복지개선 여론, 야생동물 피해사례 증가
• 자원공급망 위협 확대, 순환경제는 국제 흐름	• 에너지와 함께 광물자원(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도 자원무기화 우려 • 재생플라스틱 재생금속 바이오연료 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치수대책 전환 원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정비 대심도 빗물터널(강남, 광화문) 지하방수로(도림천) 사업착수, 하수관 키우기 사업 확대, 주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하천 수위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국가가 직접 정비, 하천 준설 본격 확대, 신규 댐 건설 등 • 안전관리 효과적 홍수 방어를 위해 제방 등 주요시설 중심 안전기준 상향, 홍수 취약 지구 재조사·지정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감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확대

■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정비 감축하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 토록 배출권거래제 개선
녹색투자가 이끄는 지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생 서천 구 장항제련소 주변부지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주물공장 일대) 오염정화,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오염되었던 지역을 주민건강·지역발전 선도 모델화 • 지역상생 수익분배, 지역채용, 관광명소로서 수상태양광 시설 확산

■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민감·취약계층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환경안전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 확대 •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 지역 맞춤형 모델 발굴 및 확산* ※ 폭염·한파대응 쉼터(그늘막, 쿨링포그 등), 결빙취약지 개선 등('24, 95억원) ※ 단열·창호 개선(산업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업

[주요 업무계획 법제처]

업무추진 방향

- ①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 ②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 ③ 지방시대 실현 지원
- ④ 법령서비스 혁신

2023년 대비 2024년 정책변화

신규 정책

- 디지털 시대 전환에 따른 법제 개선
-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현장 갈등 해결

지속 정책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

■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활용 법적 기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 모색 및 확산 기반 마련 • 데이터 공유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하여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여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 일괄 정비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갈등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의견수렴 관계 공무원, 정책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법령 실태 분석 실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법제 개선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정비

■ 지방시대 실현 지원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자치법제 역량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 종합계획 이행 지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이행에 필요한 조례 마련에 대해 종합 법제지원 제공, 지역별 특화 정책 신속 구현

■ 법령서비스 혁신

주요 정책과제	세부계획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일상용어나 문장 · 질문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연내 대국민 공개 • 생성형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 조문, 입법 배경 및 취지, 판례 · 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정리 · 요약하여 제공하는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건축도시 정책동향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 자료와 정책 정보 및 학술 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 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 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